

경제와 노후생활

■ 경제

- 동 향 :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 예년 대비 안정
- 이 슈 : (경제)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산업) 중국의 외투기업 유치정책 7대 변화와 시사점

■ 노후생활

- 테 마 :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활성화 과제
- 세 심 록 :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이유
- 북 리 뷰 : 텍스 헤이븐(Tax Havens)

□ 동향

○ 2014년 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1% 상승, 전년동월대비 1.6% 상승하여 예년에 비해 안정된 상황이 전망됨

- 농산물 가격 안정이 소비자물가 안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개인서비스 요금(전월비 0.4%) 상승이 전월대비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며, 통상적으로 여름철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전월비 0.0%)되어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축소됨
 -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4% 상승, 신선식품물가는 전년동월대비 8.3% 하락하였음
- 향후 물가는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 가능하나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기저효과 등 기술적 요인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서서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태풍 등에 의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확대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13개월 연속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7월말 현재 3,680.3억달러로 세계 7위를 유지

- 외환보유액 증가는 주로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355.9억 달러(91.2%), 예치금 217.2억 달러(5.9%), 금 47.9억 달러(1.3%), SDR 34.8억 달러(0.9%), IMF포지션 24.5억 달러(0.7%)로 구성됨
- 2014.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7위 수준임
 - 1위: 중국 39,932억 달러, 2위: 일본 12,839억 달러, 3위: 스위스 5,568억 달러, 4위: 러시아 4,783억 달러, 5위: 대만 4,235억 달러, 6위: 브라질 3,735억 달러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3/4	4/4	1/4	2/4	4월	5월	6월	7/18	8/1
실물지표	GDP성장률(%)	2.3	3.0	1.1	0.9	0.9	0.6	-	-	-		
	제조업생산지수(%)	0.7	-1.6	0.1	1.8	0.6	0.3	2.5	-2.3	0.4		
	소비자물가지수(%)	2.2	1.3	1.4	1.1	1.1	1.6	1.5	1.7	1.6		-
	실업률(%)	3.2	3.1	3.0	2.8	4.0	3.7	3.9	3.6	3.5		
	경상수지(억달러)	508.4	798.8	237.8	248.4	151.3	241.3	71.2	71	79		
금융지표	국고채(3년)(%)	3.13	2.79	3.01	2.90	2.87	2.82	2.88	2.84	2.75	2.58	2.51
	원/달러(원)	1,126.8	1,095.0	1,112.2	1,062.1	1,069.0	1,029.6	1,044.6	1,025.0	1,019.4	1,017.7	1,026.5
	코스피지수(P)	1,930.4	1,960.5	1,917.7	2,009.3	1,946.1	1,993.2	1,991.2	1,994.1	1,995.1	2,006.4	2,047.9

주 : 제조업생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금융지표는 7/21~8/1의 평균값임.

□ 이슈 : (경제)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¹⁾ -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전세가 안정으로 소비여력 확대 필요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가계의 주거형태 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소비를 늘리는 자산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또한 전월세 가격 변동이 임차가계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가계의 주거형태는 크게 자가, 전세, 월세 가계로 나누어 진다. 자가 가계의 경우 주택매매가격, 전세 가계는 전세가격, 월세 가계는 월세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가계 소비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각각 분석하였다. 자가 가계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미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이 증가하고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여력이 확대되어 소비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가계는 임차 비용이 증가할 경우 주거비 상승과 대출증가 등으로 소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 결과 자가에 주거하는 가계는 주택매매가격이 1% 오를 경우 가계소비를 0.1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주택에 주거하는 가계는 전세가격이 1% 오를 경우 소비를 0.30%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주택에 주거하는 가계 역시 월세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소비를 0.12%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에 적용시켜보면 최근과 같이 집값 상승세가 부진하고 전월세 가격 불안정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자가, 전세, 월세 가계 모두 소비 위축 현상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최근 회복세가 미약한 소비와 전체 실물경기가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첫째,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방지하여 주택보유자들의 자산효과를 통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임차 가계의 경우 전세, 월세 가격 안정화를 통하여 소비 여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셋째,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민간의 주택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경제연구본부 김천구 선임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

1)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전세가 안정으로 소비여력 확대 필요” 14-30호 (2014. 07. 25.) 에서 발췌 요약.

□ 이슈 : (산업) 중국의 외투기업 유치정책 7대 변화와 시사점²⁾

중국은 1978년부터 자력갱생형 폐쇄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대외개방·경제개혁을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기조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는 과거와 달리 선별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펼쳐 경제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12.5규획 기간(2011~2015년)에 제시된 외투기업 유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요건, 투자대상 산업범위, 반독점 규제, 고용 및 사회보장책임, 조세, 환경책임, 청산제도 등 7개 세부 분야의 정책 현황과 변화 방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현행 외투기업 유치정책을 7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관련 규정이 완화된 측면이 있는 반면 강화된 측면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관련 정책이 완화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투기업 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있다. 외투기업 설립요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정부의 간섭통제를 최소화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외투기업의 투자대상 산업은 고도화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 출범을 앞둔 2012년부터 하이테크 제조업, 지적재산권사업 등 산업의 질적 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분야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셋째, 외투기업 청산 관련 규제도 완화되었다. 인파산법에서 기업파산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중국 진출 외국계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외투기업 유치정책이 강화된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투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강화되었다. 외투기업의 중국 내 영향력 확대 등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되면서 외투기업의 담합, 시장지배지위 남용, 기업합병 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둘째, 외투기업의 고용 및 사회보장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가속화 되면서 노동자 최저임금 지속 상향 조정은 물론 노동자에 대한 경제보상금이나 사회보장금 및 사내 노조 지원 등에 대한 의무도 강화되었다. 셋째, 조세의무도 강화되었다. 제조업 부문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기존 세금우대 사항을 모두 폐지하는 등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하였다. 넷째, 외투기업의 환경 책임도 강화하고 있다. 기업들의 유해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하는 한편 환경부담금, 벌금 등의 규제도 강화하였다.

2)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중국의 외투기업 유치정책 7대 변화와 시사점” 14-26호 (2014. 07. 21) 에서 발췌 요약.

< 외투기업 유치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 >

분 야	주 요 내 용	평 가
설립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기업 설립 조건 완화 • 행정절차 간소화 등 	완화
투자대상 산업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가능 산업 및 장려 산업 범위 점차 확대 • 고위기술(하이테크), 서비스 등 분야 개방 등 	완화
반독점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기준 엄격히 적용 • 외투기업 반독점, M&A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강화
고용 및 사회보장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기준 상향 • 경제보상금, 사회보장금 등 책임 강화 	강화
조세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기업 소득세(법인세) 인상, 대부분 혜택 폐지 • 하이테크 등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유지 	강화
환경보호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물질 배출 및 사후관리 기준 엄격히 적용 • 위법행위 발생시 법적 책임 강화 	강화
외투기업 청산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기업 파산절차 등 규정 명시 • 기업갱생 유도 정책 실행 	완화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은 외투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은 용이하게 해준 반면 전반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고 있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다. 향후에는 특정 지역, 산업에서 단계적으로 중국식 외투기업 유치정책을 확대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특화 정책으로 자유무역특구, 연해지역 경제개방특구에서 외투기업 유치 정책의 검증을 진행함과 동시에 내륙지역에 대한 외국자본유도 정책도 확대할 전망이다. 그리고 산업특화 정책으로 산업 고도화 추진을 목표로 외투기업에 대해 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 산업 개방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외투기업 유치 전략이 변화함에 따라 對中 투자전략의 틀을 정비하고 우리기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첫째, 중국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 지역(省) 별, 업종·품목별 맞춤형 법률 및 시장정보제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R&D, 기획 등 분야에서 중국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공조를 통해 발 빠른 중국 내수시장 침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수출 주력형 우리 기업들이 중국 고부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조세 측면에서의 지원과 더불어 국내 R&D 인프라, 금융시스템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외투기업 투자가능 산업 범위의 확대 정책에 대응해 對中 투자 고도화 대책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책임 강조에 따른 비용압박 가중에 대비해 생산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미래연구본부 천용찬 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 테마 :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활성화 과제

고령친화산업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의하면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이며, 고령친화제품 등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수요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2010년 현재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요양,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여가, 금융, 주거, 용품 등 주요산업 9개 부문의 시장규모를 모두 합해 33조 2,241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이것은 2020년에는 약 125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니어 시장을 겨냥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기획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나 분야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망과 분석이 미흡하여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초부터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노년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와 과학기술이 융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태계 형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향후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오늘날 고령친화산업은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기회를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융합 R&D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1. 고령친화산업이란 무엇인가?

- 2006년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의하면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의미함
- ‘고령친화제품 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임
 -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 노인요양 서비스

-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 노인을 위한 의약품·화장품
 -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 **고령친화산업은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은 고령친화산업 범위 및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9대 산업(요양,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용품, 금융, 주거, 여가)으로 체계화하고, 산업을 분류함³⁾
 - 고령친화산업은 산업의 전 분야에서 발달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개념정의, 범위, 분류체계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미흡함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산업 부문	대분류
고령친화 요양산업	시설요양서비스, 재가요양서비스, 예방지원서비스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신경계용약, 대사성의약품, 순환계용약, 해열진통소염제, 안과용제, 전립선치료제, 종양치료제
고령친화 식품산업	식품,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기초 제품류, 색조제품류, 바디제품류, 헤어케어류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치과 분야, 재활 분야, 진단 분야, 치료 분야
고령친화 용품산업	개인건강·의료용품, 기능저하예방용품, 이동기기, 목욕용품, 배변용품, 침구용품, 가사용품, 주거설비용품, 정보통신기기, 여가용품
고령친화 금융산업	장수리스크, 건강리스크, 재무리스크
고령친화 주거산업	주택 개보수, 고령자주택공급
고령친화 여가산업	스포츠, 문화, 관광/레저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2. 고령친화산업 시장 현황

-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수요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5)의 보고서에 의하면 고령친화산업의 규모는 2002년 6.4조원에서 2010년 30.5조원, 2020년에는 115.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⁴⁾

³⁾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⁴⁾ 대통령직속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 현대경제연구원(2011)은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02년 6조 3,820억원에서 2010년 22조 1,906억원으로 증가하고, 2018년에는 83조 7,6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⁵⁾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은 2010년 요양,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여가, 금융, 주거, 용품 등 주요산업 9개 산업별 합한 33조 2,241억원을 전체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로 제시하였고, 2020년에는 약 125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⁶⁾

- 고령친화산업 시장 동향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미흡함

-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중 금융산업(31.8%) 및 여가 산업(22.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⁷⁾
- 2020년 고령친화산업 가운데 규모의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 또한 금융산업으로 전체 시장의 48.8%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산업 분야별 시장 규모의 변화에 관한 통계자료는 아직 구체성이나 다양성에 있어서 미흡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고령친화산업에 관심 있는 개인과 기업에게 정확한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음

<고령친화산업의 세부산업별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CAGR (10-20)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요양	25,675	7.7	62,234	9.2	125,188	10.0	17.2
의약품	30,486	9.2	57,464	8.5	108,315	8.7	13.5
의료기기	10,903	3.3	13,516	2.0	16,975	1.4	4.5
화장품	5,109	1.5	11,541	1.7	26,070	2.1	17.7
식품	48,990	14.7	90,128	13.3	165,810	13.3	13.0
여가	76,088	22.9	110,268	16.2	161,917	13.0	7.8
금융	105,663	31.8	301,711	44.4	610,404	48.8	19.2
주거	9,616	2.9	9,073	1.3	6,824	0.5	-3.4
용품	19,711	5.9	23,347	3.4	28,322	2.3	3.7
전체	332,241	100.0	679,281	100.0	1,249,825	100.0	14.2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5) 현대경제연구원(2011), 신성장산업의 발굴: 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 『VIP REPORT』, 통권 제39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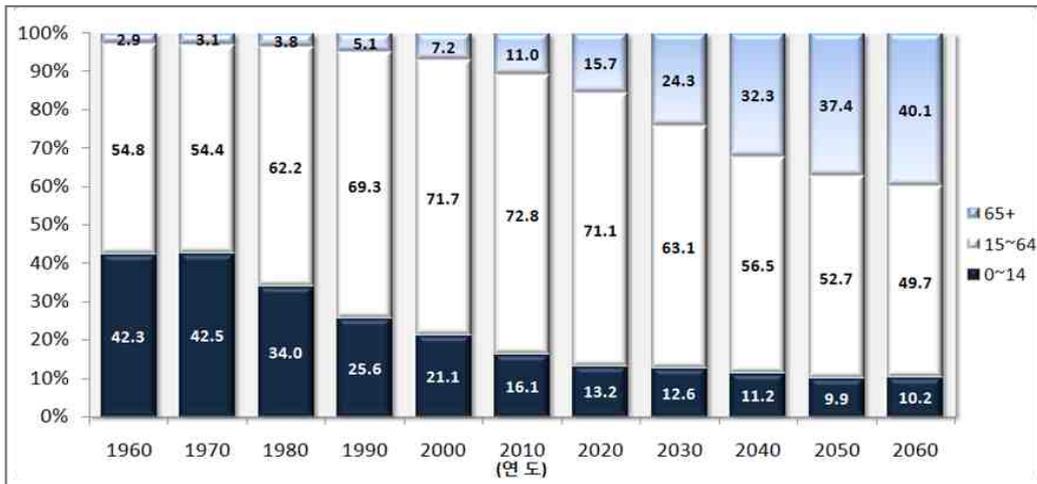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 고령인구의 증가는 고령친화산업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전망이다

-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1960년 73만명(2.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현재 545만명(11%), 2030년 1,269만명(24.3%), 2060년 1,762만명(40.1%)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고령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1960~2060)>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3. 창조경제 시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과제⁸⁾

- 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투자와 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으로 고령친화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 도래

- 정부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을 통해 2017년까지 정부 R&D 예산의 20%를 삶의 질 영역에 투자할 계획임
- 산·학·연 협력 연구 및 부처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초·원천-응용-개발상용화 단계간 연속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처간 협력강화 및 연계사업 역할 모델 제시함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5대 분야 가운데 하나가 '건강장수시대 구현'이며, '저출산·고령화 대응 강화'가 중점 20개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30개 중점 국가전략 기술에 '건강관리서비스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기술이 제시됨
- 미래창조과학부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시범사업 가운데 '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등 고령친화산업 관련 R&D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과제는 차홍봉, 박영란, 원영희, 문혜선, 서지영, 윤민석, 박경순(2013), 『친고령산업 R&D 인프라 구축 기획 연구』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 보건복지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산업 육성전략을 주요 정책 과제에 포함하고,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함

①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과 고령친화산업진흥법(2006)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은 제1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가운데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근거하여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산업경쟁력 확보, 국내·외 시장 활성화,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함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 및 운영, 표준화 확대,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를 통해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산업경쟁력 확보가 필요
 - 국내 수요기반 확충,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분야 설정, 산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 고령친화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개척 지원 필요
 - 산·학·연 협력 연구 및 부처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초·원천-응용-개발상용화 단계간 연속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개발 및 체계적인 성과평가 필요
- **민간 참여 확대 방안 제시**
 - 지난 10년간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100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고령친화산업 시장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며 수요예측을 위한 종합정보가 부족함
 -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에 대한 추계 자료나 수요자에 대한 심층 정보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함

② 고령친화산업 R&D 지원 융합 플랫폼 구축

- **고령친화산업 R&D 확대 및 성과 관리 체계 구축**
 -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의 미비, 지원 부처 및 기관의 산재, 기업 또는 민간 부분의 연구개발 사업 동향 파악의 어려움 등이 고령친화산업 R&D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과학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 R&D 정보공유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키워드 검색방법으로 고령친화산업 관련 R&D 사업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지 고령친화산업 R&D 관련 과제는 총 745건이 진행되었으며 예산은 총 1,523.76 억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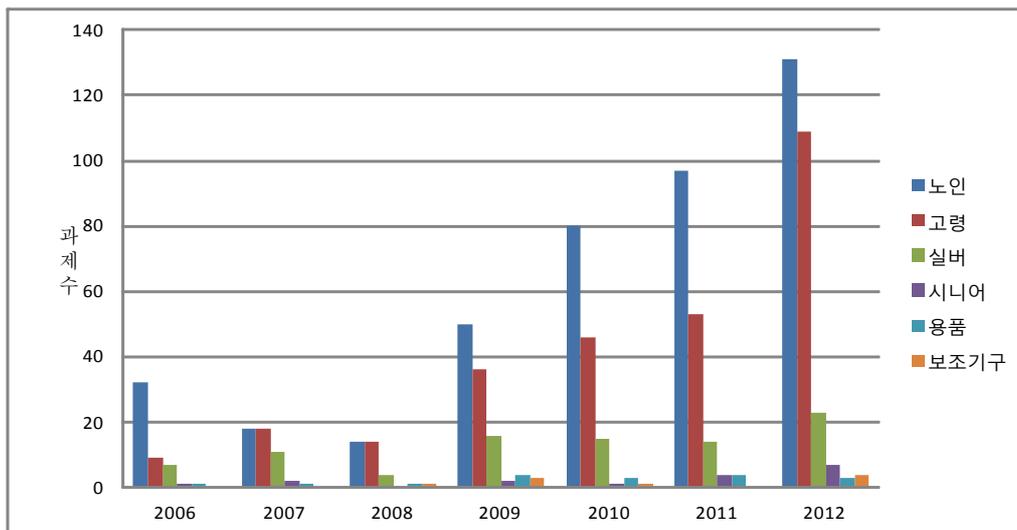
< 키워드별 고령친화사업 관련 R&D 과제 수 >

(단위: 개, %)

키워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과제 수	%														
노인	32	64	18	36	14	41	50	45	80	55	97	57	131	47	422	50
고령	9	18	18	36	14	41	36	32	46	32	53	31	109	39	285	34
실버	7	14	11	22	4	12	16	14	15	10	14	8	23	8	90	11
시니어	1	2	2	4	-	-	2	2	1	0.5	4	2	7	3	17	2
용품	1	2	1	2	1	3	4	4	3	2	4	2	3	1	17	2
보조기구	-	-	-	-	1	3	3	3	1	0.5	-	-	4	2	9	1
합계	50	100	50	100	34	100	111	100	146	100	172	100	277	100	840	100

자료 : 차흥봉 외(2013), 『친고령산업 R&D 인프라 구축 기획 연구』

<고령친화산업 관련 R&D 증가 추이>



자료 : 차흥봉 외(2013), 『친고령산업 R&D 인프라 구축 기획 연구』

- 최근 고령친화산업 R&D 동향을 살펴보면 대학을 중심으로 기초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이 어떠한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구체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대부분의 연구개발사업이 용품, 의료기기 등과 같은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있음

- 기업과 소비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R&D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크에도 불구하고 고령친화산업의 인프라 구축이나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 특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정부 기획 사업의 하위 영역에 고령친화 서비스, 고령친화 의약품, 고령친화 식품, 고령친화 기기용품, 고령친화 화장품 연구개발 과제가 일부 포함

- 해외 고령친화산업 R&D 동향

-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인구의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되었기 때문에 1970년대를 전후하여 고령사회 관련 연구소들이 설립되었음
- 노화과정과 고령사회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다학제간 접근을 강조하고 다양한 연구기관 간의 융합 프로젝트 추진
-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고령사회 관련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다양한 종합연구소들이 있으며, 동 연구소를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복지수요에 대응할 주요 기술의 발굴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오늘날 이와 같은 연구소들은 방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대중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추세임
- 최근에는 학계, 산업계, 정책 부서 간의 연계와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가는 추세임
- 장애인과 노인의 재활을 위한 R&D 성과를 토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버경제 프로젝트 추진

- 고령친화산업 영세기업 R&D 및 산업화 지원 확대 필요

-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인구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기회가 확산되고 있음
-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의 경우 경제적 기반을 보유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각되면서 의약품, u-헬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령친화산업이 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그러나 대다수의 영세기업을 위한 R&D 및 산업화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③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체계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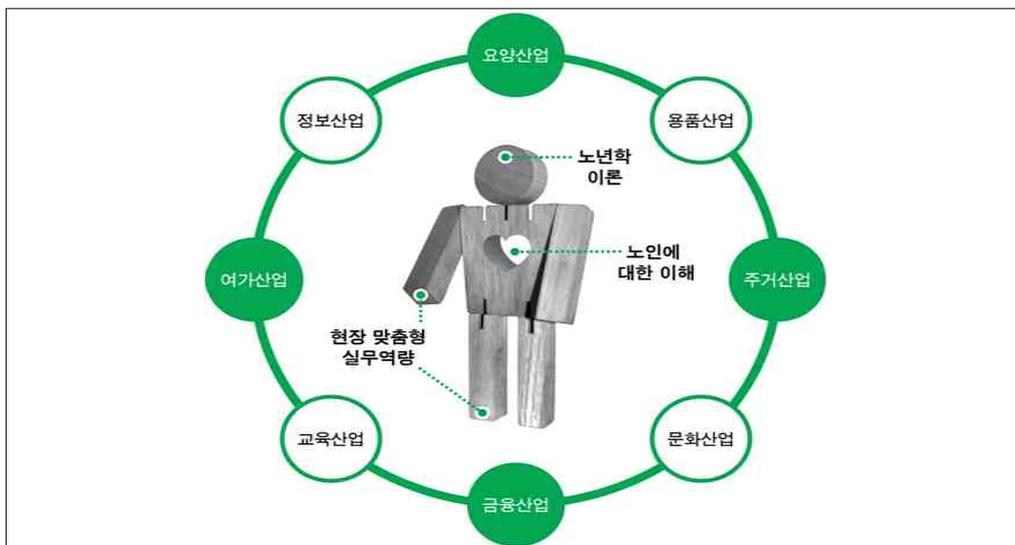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전후하여 국내 대학교, 연구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관련 인력 양성 사업을 시작함. 그러나 아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아직 표준화된 교과과정
이 없는 상황이며, 개별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양성하고자 하는 인
력에 대한 개념과 직무설계가 미흡한 실정임
-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R&D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문인력 양성 시
스템 이 필요함

- 분야별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필요

-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역량 및 고령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기술 및 제품을 서비스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있어, 고령친화 제품의 기술적 기능과
사용자의 서비스 니즈를 동시에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
고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됨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인재상>



자료 :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특성화사업단(2008),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백서』

강남대학교 교수 박영란 (031-280-3730, yeongranpark@hanmail.net)

□ 세심록(洗心錄)

○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이유

“기술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슈페터)”, “기회를 사업화하는 모험(피터 드러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한 석학들의 정의이다. 익숙한 단어이지만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최대한 단순화해 보면 기업가, 또는 기업이 갖추어야 할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은 혁신(innovation)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이유로 경제 발전, 특히 창조경제 구현에 있어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주간지 포브스는 기업의 중요성과 기업가정신의 필요성을 역설한 경제학자 6인을 소개했다.("6 Economists Every Entrepreneur Should Know About", Forbes, 2014. 1. 7.) 20세기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조지프 슈페터'와 시카고학파의 창시자 '프랭크 나이트', 이 외에 '로널드 코스', '주드 와니스키', '루벤 브레너', '이반 라이트' 등이다. 포브스는 이들 경제학자들에 대해 "이념·전공·개성은 모두 다를 지라도 기업 가치를 중시했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시카고대학 석좌교수를 역임하고 지난해 102세로 타계한 로널드 코스에 대한 소개가 눈길을 끈다. 코스는 '기업의 본질(The Nature of the Firm, 1937)'이란 논문으로 노벨 경제학상(1991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해 '거래비용'의 개념을 적용했다. 이전까지의 경제이론은 개인이 아닌 기업이 어떻게 경제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거가 미약했다. 코스는 정보를 얻고 가격을 협상하는 등의 모든 경제 활동을 거래비용이라고 했다. 따라서 개인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기업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빛대어 보면 기업가정신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핵심 동력원이다. 따라서 시장경제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기업가정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선진기업들은 실패를 경험한 인재들을 선호한다고 한다. 성공의 밑거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가정신은 모험정신과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금의 불황기에 기업가정신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안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상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To know is nothing at all; to imagine is everything.

- 아니톨 프랑스(Anatole France)

□ 복리뷰 : 택스 헤이븐(Tax Havens)⁹⁾

저자 로넌 펠런(Ronen Palan)은 런던시티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 교수로 세계화, 역외경제 및 국제 정치경제학을 연구했으며 공동저자 리처드 머피(Richard Murphy)는 영국 LLP 조세연구소 CEO로, 크리스티앙 샤바뇌(Christian Chavaigneux)는 프랑스 은행의 이코노미스트로 활동

○ 주요 내용

- 조세회피처의 정의 및 현황

- 조세회피처는 역외 거주자가 조세와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지역으로 창업이 용이하고 세율이 0에 가까우며 비밀보장을 준수한다는 공통된 특징
-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케이맨제도·버뮤다버진 아일랜드·룩셈부르크·스위스·영국·싱가포르·홍콩 등이 언급
- OECD는 약 5~7조 달러가 조세회피처에 보관되어 있다고 추정하며 UNCTAD는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약 30%가 조세회피처를 통해 투자된다고 추정

- 조세 회피의 주요 수단

- '이전가격 조작' 전략은 조세회피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이 활성화될수록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규모가 증가
- 돈세탁, 횡령 등 부정부패로 인한 불법자금보다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다국적 기업의 자금이전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심각한 것으로 추정

- 조세회피처의 명과 암

- 자국 내 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 경쟁 심화로 조세회피처의 존재가 국가 팽창주의의 제어장치로 기능한다는 긍정적 견해가 존재
- 반면 조세회피처는 그림자 경제의 핵심 요소로 소득 분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 견해도 제기

- 조세회피처 규제를 위한 제도적·비제도적 장치

- 조세회피처 규제를 위한 OECD의 이전가격 설정 가이드라인, 미국의 피지배 외국회사법, EU의 사업과세 행동강령 및 단일 원천징수세 등의 제도적 장치 설정
- 최근에는 국제기구들이 조세회피처에 해당하는 국가 리스트를 발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전략을 보조적으로 사용

⁹⁾ 로넌 펠런 외 2인, *택스 헤이븐(Tax Havens)*, 지식의 날개, 2013.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 HRI 리더스 포럼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만찬

장소

서울시 주요호텔

시간

19:00 - 19:35 만찬 및 인사교류
19:35 - 19:45 경제·산업동향 브리핑
19:45 - 21:00 주제 강연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잠인정신)
-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혜택

- 명사들의 주제강연(경제·경영·인문·사회·예술)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매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제공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연회비

- 1명 가입시 100만원(1인)
- 2명 가입시 90만원(1인)
- 3명 이상 가입시 80만원(1인)

